

# 추경호 “하반기 3%대” 물가 낙관론, 금리 구두개입 등 ‘논란’

“1분기 지나면 물가 4%대 보이고 하반기 3%대... 물가 서서히 안정”

연초 전기·가스요금 인상 이어 4월 맥주 등 주류값 인상 앞뒤 ‘물가상향 안이하게 본다’ 지적 금리발언에 “부적절” 목소리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갈 것이라며 또 다시 물가 낙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연초 전기·가스요금에 4월부터 맥주, 막걸리 등 주류 가격 인상도 앞두고 있는데 정부가 물가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추 부총리는 최근 금리 인상 움직임에 서민·민생경제 영향을 언급하는 등 통화 시장에 구두 개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전날 YTN뉴스24에 출연해 물가·통화정책 관련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여타 선진국의 물가가 8~10%인데 우리는 5% 물가로 서서히 안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하고 해서 아직까지 상방압력이

높다”면서도 “그렇지만 1분기가 지나면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에는 3%대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물가 안정이 굉장히 긴요하다는 생각에서 각종 관세를 낮춘다든지 각종 세금 인하해서 우리 국민이 일방적으로 접하는 민생물가 안정에 우선점을 둘 것”이라며 “물가는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1998년 IMF 위기 이후 가장 높은 5.1%를 기록했다.

올해도 공공요금에 생필품, 주류 가

격 등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어서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라 예상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추 부총리는 또 다시 물가 낙관론을 들고 나왔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월에도 추석 명절 이후 10월부터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라 물가정점론을 주장했다.

그때도 추 부총리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예측과 다를 것이라 우려가 컸다. 실제 11월부터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요동쳤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급격하게 오른 금리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회에 구두 개입식 발언을 해 논란이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내외 금리차 등의 이유로 일정 부분 금리를 올려 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한쪽에는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서민·일반 경기에 큰 타격 줄 수 있겠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며 “금리정책을 하는 금통위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금리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정 정책 담당인 기재부 수장이 통화정책인 금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한은의 독립성을 해치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투기 세력에게 외환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금리는 1년에 8번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단·장기금리에 이어 예금과 대출금리가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줄어 물가가 낮아지고 과열된 경기가 진정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구두 등으로 개입하면 한은이

금리를 올려도 시중금리가 내리고, 통화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추 부총리의 금리 관련 구두 개입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내비치자 구두 개입성 발언을 했다. 그는 “미국과 (국내) 금리 격차가 커지면 외환 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에 가파르게 쫓아가자니 국내 경기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해져 여러 대출자들이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가계부채와 함께 서민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할 수 있어 그가 우회적으로 통화정책에 구두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 금리 인상 기조 유지 등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할 때”라며 “재정당국이 개입해 시장에 금리 인상을 회피한다는 시그널을 줄 경우 투기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中, 소비 상승에 올 성장률 4%후반 예상”

###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소비 1%p 늘면 韓성장률 0.2%p ↑ 여행중심 2분기 소비 10% 증가전망

올해 중국의 소비가 크게 반등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소비의 파급력은 대외적으로도 막강하다. 중국 소비가 1%포인트(p)만 높아져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2%p 올라간다.

2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가 작년 1.5%에서 올해 6.3% 늘어나며 성장을 견인하고, 일부는 8% 이상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금융센터 김기봉 책임연구원은 “경제 재개방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과 내수진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원 등이 소비를 촉진하는 가운데 소득 향상에 따른 소비잠재력도 매우 크다”며 “올해는 중국의 소비가 크게 반등하면서 경제성장률을 4% 후반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 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서 오는 2분기에는 여행부문 등을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의 한 거리가 춘절 장식으로 가득차 있다.

/신화·뉴스시스

중심으로 1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집단면역이 빠르게 형성된다면 장기간 억눌려온 수요가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관광의 경우 중국발 승객을 제한하는 국가가 많아지면서 국내 유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소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졌다.

김 책임연구원은 “지난 2021년 소비의 성장 기여율은 65%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18%포인트나 상승했으며 올해는 70%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

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외적으로도 중국 소비가 1%포인트 늘어날 경우 싱가포르 성장률이 0.7%p, 태국 0.4%p, 한국 0.2%p 높아지는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제약요인도 여전하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빨리 재개방 조치를 단행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고, 노년 가구 등을 중심으로 대면 소비를 꺼리기 시작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60% 이상이 재개방 이후 외출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안삼미 기자 smahn1@

## 고성능 메모리 확대로 실적 악화 상쇄

>> 1면 ‘한파 속 봄 기운 도는’서 계속

상반기 흑한기를 얼마나 ‘잘’ 나는지가 관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8Gb 3200MHz 평균 시세는 1.8달러대로 떨어졌다. 트랜드포스는 1분기까지 고정 거래 가격이 1달러 후반대로 떨어

질 것으로 예상한바 있으며, 전문가들도 상당수가 2분기까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까지도 감산에 돌입했지만, 삼성전자는 감산 가능성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그나마 고성능 메모리 비중이 높아지

면서 실적 악화를 상쇄하는 분위기다. 16Gb D램 사용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DDR5 가격도 DDR4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예상보다 보급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데이터센터 구축이 속도를 내는 상황, HBM과 CXL 등 차세대 메모리도 GPU와 서버에 도입되면서 시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김재용 기자 juk@

##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국인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국제기준에 맞춰 제도 개선하기로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한다.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결제즉시(T+2)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없앤다. 국제기준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MSCI)은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등록의무화 ▲장외거래 사전심사절차 ▲통합계좌 이용시 투자내역 즉시보고 ▲영문고시 접근성 제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등록의무를 폐지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채권 등을 투자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등록하면, 법인과 개인 투자등록번호(외국인ID)가 부여되고, 실시간 거래내역이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구조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법인은 법인식별번호(LEI), 개인은 여권번호가 식별번호로 활용돼 계좌정보가 관리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글로벌 운용사와 증권사가 본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다

수 투자자가 주문한 주식매매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계좌개설 시 투자자등록을 사전에 마친 외국인만 포함할 수 있고, 결제 즉시(T+2)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2017년 이후 통합계좌를 사용한 사례가 없다.

금융위는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통합계좌명의로 자인 글로벌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는 세부투자내역을 관리한다. 금융당국은 감독 목적으로 필요하면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요구해 징구하고,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를 확대해 사전심사 부담도 줄인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증권 거래 시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장외거래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의 범위를 확대해 신고부담을 낮춘다. 현재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CB·BW) 권리행사 등이 다. 금융위는 3분기 이후 펀드 합병·이전 이후 실질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나 기업합병·구조개편에 따른 현물출자, 현물배당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제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것”이라며 “투자환경이 개선돼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